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담당 : 참여연대 이경민 010-7266-7727, 보건의료단체연합 이서영 010-6354-1683, 한국노총 김윤정 010-5358-0401, 민주노총 우문숙 010-5358-2260,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현 010-7726-2792

제 목 [보도자료] 무책임한 재택치료 방침 철회 및 병상·인력 확충 요구 기자회견

날 짜 2021. 12. 02. (총 10 쪽)

보도자료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내팽개친 정부를 규탄한다”

무책임한 재택치료 방침 철회 및 병상·인력 확충 요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1.12.02.(목) 오전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2021년 12월 1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5,123명이며, 위중증 환자는 723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매우 위태로운 상황임. 정부는 11/29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발표했지만 병상과 인력 확보 방안은 전혀 내놓지 않고, 확진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 치료를 받는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힘. 정부는 재택 치료를 통해 병상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하나 이는 치료가 아닌 모니터링일 뿐이고, 이송 가능한 병상이 없으면 재택치료는 무용지물임. 감염병 상황이 장기화될 것이 예측되었는데도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제대로 된 공공의료 정책 하나 내놓지 못했고 결국 위기 상황에서 시민에게 치료의 책임까지 떠넘기고 있음.
- 정부는 지난 10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확진자수 5,000명까지 감당 가능한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했음. 실제 지난 11월 한달 간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확보된 중증 병상은 27병상에 불과함. 결국 정부는 병상확보는 커녕 이렇다할 대책 없이 워드코로나만 발표한 것임. 또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민간병원은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고, 병상과 인력 동원에 매우 소극적으로 응하고 있음.
- 이에 시민사회단체(불평등끝장넷,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무상의료운동본부)들은 △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재택치료 계획 폐기, △감염 확산을

막고 모두를 보호할 사회적 방역 시행, △민간 병상과 인력의 즉각적인 확충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또 △침묵하고 있는 대선 후보들에게 현재의 병상, 치료 위기를 극복할 방안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공약 제시를 촉구함.

- 기자회견 이후 정부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이 날부터 재택치료 계획 폐기 및 병상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12/2, 오후12시~1시, 청와대 앞 효자로)를 시작함. 오는 12/6(월)~12/10(금) 오후12시~1시 청와대 효자로, 광화문 사거리, 국회 앞에서 진행될 예정임.

2. 주요발언내용

- 사회 : 이지현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1 :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 코로나19 대유행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어제자 코로나 확진자가 급기야 5,000명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당장 이런 추세가 꺾이지 않고 최대 1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많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희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택에서 대기중이다 사망하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병상과 인력 부족 때문에 공공의료기관만의 대응이 불가능해진 조건에서 민간의료기관의 동원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환자 병상 마련이 어려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코로나19 대유행이 벌써 1년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다. 지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공공의료 강화의 중요성과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수없이 강조되었으나 이렇다할 변화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시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은 방역을 강화할 때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시민에게 치료의 책임까지 떠넘기고 있다. 정부는 당장 재택치료 방안을 폐기하고 민간병상과 인력을 확충해 시민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 즉시 민간병상과 인력 확충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는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만 혈안이고, 공공의료 확충 예산도, 보건의료인력확충 예산도 제대로 챙기지 않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정쟁과 상호 비방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코로나에 코통받는 국민과 환자들만 오롯이 모든 희생을 당하고 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 공공의료 확대와 인력확충으로 국민의 생명을 구하라.

- 발언2 : 최은영 서울대병원 간호사

- 재택치료'라 읽고 '자택 대기중 사망 할 수도 있음'이라고 해석 : 12월 1일, 정부는 <코로나 19 재택치료 전환에 따른 추진계획>을 발표 했다. 그러나 '재택치료'는 '자택 대기중 사망

할 수도 있음'이라고 해석 된다. 말이 좋아 치료이지 방치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도 원격진료시 오진의 우려나 위험성이 있는데 코로나는 급성 질환이고 환자가 관리할 수도 없다. 호흡곤란이 오면 산소가 필요하다. 급격히 악화되면 고농도산소를 투여해야하고, 순식간에 기도삽관을 하기도 한다. 결국 입원할 병실이 없어서 재택치료를 하는 것이다.

- 1인 가구의 경우나,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위험상황에 처해도 전화조차 걸 수 없다. 일례로 산부인과 다니던 만삭의 코로나19 환자가 양수가 터졌지만, 다니던 병원에서는 병실이 없어서 입원을 못 받아주겠다고 해 결국 응급실에서 있다가 병동에 입원한지 30분만에 출산을 했다. 대한민국 임산부들은 코로나 상황에선 다니던 병원도 못 다닌다.
- 파견의료인력 말고 코로나 환자를 돌볼수 있는 인력을 확대하라 : 정부는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 파견간호사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현장에 필요한 건 1회용 인력이 아니다. 12월 3일, 서울대병원에는 또 다시 코로나 중환자실(DICU 4)이 만들어진다. 이제 서울대병원에 마지막 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일반병동으로 전환하고 인력을 빼서 운영하게 된다. 더 이상 돌려막기할 간호인력도 없다. 간호 인력의 숙련도에 따라 환자의 목숨이 왔다갔다 한다. 파견인력으로 머리수만 채우는 것은 이제 그만 해야 한다. 땀질식 인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응급상황에서는 응급처방과 대처가 필요하다. 시범병원인 서울대병원, 보라매 병원에 즉각 인력을 투입하여 환자간호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손실보상금 형태의 일회용 처방을 중단하고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정책과 예산을 수립해라 : 코로나 치료에는 국민의 생존이 걸려 있다. 이미 정부는 코로나 치료에 3조가 넘는 돈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지금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국민들은 공공병원에 생명을 기댈 수 밖에 없다. 제대로 된 치료를 위해서는 공공병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1회용 땀질식 인력이 아니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고정적 인력이 필요하다. 시간을 놓치면 우리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질지도 모른다. 그 상황만큼은 피해야 하지 않겠는가?
- **발언3 : 안형진 홈리스행동 활동가**
 - 최근 거리, 쪽방, 고시원, 시설 등 비적정 거처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10월 말부터 현재까지 각 구별 집계 등을 통해 추산한 바, 홈리스 확진자의 수는 170여명에 달한다. 하루가 다르게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홈리스 확진자들은 재택치료와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곳에서 실상 방치되고 있다. 지난 2주 동안 40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발생한 종로구 쪽방에선 10일 가까이 확진자를 쪽방 내에 머물게 했던 사례까지 있었다고 한다. 그 결과, 주민들은 감기와 같은 유사증상만 보여도 퇴거를 종용받고 있으며, 주민 간 갈등이 격화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 정부는 지난 달과 11/30일 복지부의 발표(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재택치료 확대방안)에서 생활 필수공간이 분리되지 않는 이들은 재택치료의 대상이 아닌 생활치료센터 이용 대상임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홈리스는 재택치료와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상태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 즉시 이송이 불가능하다면, 최소 자가격리가 가능한, 독립적인 위생설비를 갖춘 임시거처를 홈리스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에게 제공하는 대책과 더불어 개별 사례관리 계획이 수립됐어야 옳다. 정부와 지자체는 재택치료 확대를 운운하기에 앞서, 이런 현실에 대한 대책부터 모색했어야 옳다.
- 우리는 이 긴급한 사태를 앞에 두고, 복지와 방역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에게 요구하며 행정1부시장에게 긴급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사태의 긴급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시는 묵묵부답일 뿐이다.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논의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달고 있는 지금, 정부와 서울시가 할 일은 홈리스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의 현실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이송 및 치료대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행정' 재난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 **발언4** : 박정은 불평등끝장넷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 지난 월요일, 정부는 방역대책을 발표하며, "확진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 치료를 받는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무책임한 방역대책이다. 무엇보다 병상확보나 의료 인력 확충도 아닌 재택치료를 내놓은 정부 방침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 재택치료는 확진자와 동거하는 가족 등 시민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그 자체로 부적절하고 안일한 방역이다.
- 뿐만 아니라, 현재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들이 대폭 늘고 있어 필요한 경우조차 입원 치료를 받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초기부터 줄곧 공공병상 확보와 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해온 시민사회는 단 한 번도 이러한 요구에 귀 기울이지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지도 않은 채 의료붕괴 위기를 초래한 정부 당국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 정부가 지난 10월 29일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서 확진자수 5,000명까지 감당 가능한 기존 병상 활용에 더해 추가적인 감염병 전담병원을 확보하고 이에 대응하는 의료인력을 사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병상 부족으로 매일 수십명이 기약없이 입원을 기다리다가 황망하게 죽음을 맞게 하는 정부를 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재정지출에 적극 나서지 않아 다른 나라보다 낮은 수준의 국가 채무를 보이게 된 것도 결코 자랑거리라 할 수 없을 것이다.
- 정부는 당장 무책임한 재택치료 방침을 폐기하고 민간병상 동원과 의료 인력 확충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위기 상황에도 나몰라라 하는 민간병원들도 병상과 인력을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지원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대선

후보들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사태에 대해 침묵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당장의 대처방안은 물론 중장기 감염병 대응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3. 개요

- 제목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내팽개친 정부를 규탄한다”
무책임한 재택치료 방침 철회 및 병상·인력 확충 요구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12월 2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무상의료운동본부
 - 프로그램 개요
 - 사회_이지현(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1_박민숙(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 발언2_최은영(서울대병원 간호사)
 - 발언3_안형진(홈리스행동 활동가)
 - 발언4_박정은(불평등끝장넷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5_추가예정
 - 기자회견 후, 질의서 청와대 전달
 - 1인 시위
 - 12/2(목)~12/3(금) : 오후12시~1시까지 청와대 앞 효자로
 - 12/6(월)~12/10(금) : 오후12시~1시까지 청와대 앞 효자로, 광화문 사거리, 국회 앞
 - 문의 : 02-723-5056, welabtax@pspd.org
-
-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 붙임자료1. 긴급호소문
 - ▣ 붙임자료2. 정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대한 시민 의견서

긴급호소문

정부는 재택치료 방침 철회하고 병상·인력 확충 위해 사력을 다하라
치료 한 번 받지 못한 억울한 죽음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감염 확산 막고 모두를 보호할 사회적 방역 시행하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오 천명이 넘었습니다.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700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을 제때 확충했다라면,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을 진작 확보했다라면, 환자들을 돌볼 의료인력을 확충했다라면 ‘살릴 수 있는’ 생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봄부터 5차 대유행이 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일상회복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이 확산되자 ‘집에서 버티라’고 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두 손 놓고 있었습니까?

분명한 것은 ‘재택치료’로는 급격히 증상이 악화되는 코로나19 환자들을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이 ‘재택치료’지 실제로는 ‘자택대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기관에서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데도 집에서 머물다 중증으로 악화되고 사망하는 일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정부가 병상이 남지 않아 입원대기자가 많은 현실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가족감염의 우려가 크고 특히 고시원과 쪽방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들은 독립된 필수시설을 갖추지 못해 확진자와 공동생활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택치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너무도 위험한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정부는 사실상 긴축재정 기조를 고집하면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몇 차례나 반복된 코로나 대유행과 병상 부족 위기 앞에 시민들이 희생됐고, 소득감소와 단절로 역대 최고의 가계부채를 짊어진 채 벼랑끝에 내몰린 시민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에 확진되어도 집에서 버티라고 합니다. 얼마나 더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입니까?

정부와 보건 의료 당국에 촉구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재택치료 방침으로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의료 체계 붕괴의 독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 준비 부족과 방역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중환자병상 포화 상태인 오늘의 위급한 상황을 정부가 인정하고 제대로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부가 감염 확산을 막을 긴급조치를 취하면서도 누구도 희생되지 않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방역을 펼쳐야 합니다. 또 정부는 사력을 다해 병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민간병원의 긴급하지 않은 비응급·비필수 진료를 미루고 감염병 치료와 필수·응급환자에 집중하도록 병상과 인력 재배치를 강하게 명령하십시오. 정부는 모든 권한과 역량을 발휘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십시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대선에 나선 후보자들에게도 촉구합니다.

대선 주자들은 일선에서 사투를 버리고 있는 의료진과 시민들의 요구를 귀기울여 듣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 긴급조치를 촉구해야 합니다. 또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무엇보다 공공의료 현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이 그간 적은 수의 확진자와 사망자를 유지해온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제한, 금지로 시민들이 다 함께 그 고통을 감내한 결과이지, 의료체계가 잘 갖춰져서가 아닙니다. 둘러보면 병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코로나 환자가 조금만 늘어도 병상 부족,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몇번이고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감염병 재난에 가장 취약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더 이상 대선 후보들이 현재의 위기 상황에 침묵해서는 안됩니다. 현재의 병상, 치료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또 다시 닥칠지 모르는 제2, 제3의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라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 앞에 분명하게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들에게도 호소합니다.

정부가 긴축재정을 핑계로, 사적 재산이라는 이유로 병상 동원과 인력 확충에 더 이상 소극적이지 않도록 절박한 목소리를 높여 주십시오. 대통령 후보들이 공공의료 확충의 비전을 제시하도록 요구해 주십시오. 공공의료 확충 시민 서명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날마다 역대 최다, 최악의 기록 경신을 멈춰야 합니다. 더 이상의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정부는 사력을 다해 병상확보와 인력확충에 나서야 합니다.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2021. 12. 2.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위/크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임대두배로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기초법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업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집걱정끝장대선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이상 의제별 연대기구)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나눔과미래,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참여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회복지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연금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지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참여환경연대,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청년유니온,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노총,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홀리스행동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대해 “시민이 정부에 묻습니다”

- 2021년 12월 1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5,123명이며, 이 중 위중증 환자는 723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 내 중환자실 병상은 이미 단 한개도 남아있지 않고, 전국에 남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단 245병상입니다. 현 의료대응 체계는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 그러나 정부가 11/29 발표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계획’을 보면, 긴급한 현재의 상황에서 감염 확산을 막아 위기를 멈출 방법도, 민간의 중환자 병상과 의료 인력을 동원할 강한 의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재택치료 위주의 의료체계 전환을 앞세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말하는 재택치료는 ‘치료’가 아니라 ‘방치’에 불과합니다. 무분별한 재택치료 확대는 중환자와 사망자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 시민사회는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이 시작된 이후부터 지난 2년간 거리두기를 지탱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재정 지원을 요구했고, 의료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병원과 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이를 무시해왔습니다. 정부는 방역정책으로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보고도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에 소극적이었고, 공공의료 예산을 늘리지 않거나 삭감했습니다. 또 민간병원을 코로나19 진료에 제대로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코로나19 환자가 조금만 늘어도 의료가 붕괴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 IMF가 지난 10월 발표한 주요 21개 선진국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GDP 대비 25.5%, 일본은 GDP 대비 16.7%인 반면 우리나라 추가 재정 지출은 GDP 대비 6.4%에 불과합니다.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일자리를 잃은 저소득층은 100조 원 이상의 가계부채를 짊어지고 삶의 벼랑끝에 내몰려있습니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시민들이 거리두기를 견딜 수 있도록 재정을 지출하고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일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던 반면, 오히려 이들의 고통을 핑계삼아 준비되지 않은 방역완화를 시행해 지금의 심각한 감염병 위기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온 국민이 날마다 코로나 확진자 동시간대 사상 최다 기록 경신 보도를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긴급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또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빠른 답변을 요청합니다. 답변 내용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1. 정부는 모든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재택치료를 기본원칙으로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급격히 중증으로 증상이 악화되는 코로나19의 특성상 이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택치료를 확대하면 집에서 제 때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중증환자와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재택치료 확대는 병상이 부족해 대기하는 환자들의 존재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혹에 어떤 입장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2. 정부는 11월 한 달간 행정 명령을 통해 중증 병상을 단 27개만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중환자병상은 0개입니다. 민간병원을 동원한다는 정부 계획은 민간병원들의 비협조 속에 늘 조속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동원 수준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현재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대기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이며, 또 오미크론 변이가 유입된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를 감당하기 위해 병상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예측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또 민간병원들의 비협조를 극복하고 동원을 강제할 실질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3.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에 비례해 중증환자도 늘어나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9일 '대응계획'에서 '광범한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는 확산세 억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지 않고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명확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 거리두기 고통을 떠넘기지 말고 자영업자들과 불안정노동자, 취약계층에게 충분한 재정지원을 하라는 시민사회 요구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4.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지정되면서 홀리스 등 취약계층이 코로나 이외의 질병으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공백 상황이 지난 2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사회적 공감대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공공병원 설립 정책도 유보적이고, 예산도 책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이유와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회신처 :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02-723-5056, welabtax@pspd.org)